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 날짜 : 2026년 4월 23일(목) / • 문의 : 대책위 언론팀 박다솔(010-7236-3011) <총 쪽>

[보도자료]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노사전 협의체 구성 지연 규탄 이재명 정부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23일(목) 10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취지

- 오늘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며 투쟁하는 날임.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날이기도 함. 중대재해를 없애자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 앞에 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서 있음. 작년 6월 2일, 태안화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중대재해로 사망하신 김충현의 동료들임.
-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나서 8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한전KPS의 불법파견 판결이 났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도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떨어졌음. 올해 1월 19일 정부는 김충현 대책위와 구성했던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 노사전협의체 논의를 완료하고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하기로 했음.
- 그러나 아직까지 한전KPS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전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지 못함. 한전KPS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한전KPS 정규직 노사가 이 합의와 별도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체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음.
-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직접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함.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순서	발언자
발언1. 취지발언	김충현 대책위 공동대표 양한웅
발언2. 규탄발언	김충현 협의체 조건희 활동가
발언3. 규탄발언	김충현 대책위 집행위원장
발언4. 규탄발언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청와대 면담이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위험의 외주화 근절 한전KPS비정규직 직접고용’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 셈인가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 다가온다. 바로 오늘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여는 날이다. 자본의 탐욕 앞에 일하다가 쓰러져간 산재 사망자를 추모하고 투쟁하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작년 6월 2일,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태안화력에서 홀로 선반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원청인 한전KPS의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작업 오더를 쳐내던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8월 28일, 한전KPS의 불법파견이 판정났다. 그리고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전KPS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전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한전KPS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에는 2026년 3월 31일까지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완료하고 직접고용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 13차 전체회의 회의록에는 한전KPS하청노동자 4인은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추천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한국노총 전력연맹 정의로운 전환협의체에서 합의사항을 변경해달라고 해서 합의문이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김충현 노동자의 목숨값을 두고 흥정을 하자는 것인가?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라고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지고 한전KPS비정규직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재명 정부와의 합의까지 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직접고용 이행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한전KPS 직접고용 약속을 이행하라!

2026년 4월 23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첨부자료1]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

원칙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 방지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발전 정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이하 가이드라인)을 참고 하되, 해당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 이후 변화된 환경(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한전KPS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 노동부 시정지시 등) 및 공정성을 고려하여 협의체에서 합의되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 하여 직접고용 방안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항

1. 한전KPS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에 따른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 대상으로 한다.
2. 전환 대상 인원은 2025.6.2.(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일) 기준 한전KPS가 발전설비 경상정비 협력업체와 체결 중인 계약에 따른 인원(설계서 상의 인원을 우선하되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산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3. 간접인력을 포함하되, 하청 본사 파견 인원은 제외한다.
4. 전환 시점에 한전KPS 정년퇴직 나이가 지난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되,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 온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

2025.6.2. 이전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위 가이드라인의 전환채용 방식으로 직접고용한다. 2025.6.3. 이후 입사한 노동자의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전협의체에서 정한다.

제3항 (직제와 처우)

1. 기존 법원의 판결 및 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한전KPS에 동종, 유사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직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노사전협의체에서 정한다.
2.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하여 노사전협의체에서 정하되, 전환 이전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한다.
3. 한전KPS 협력업체 근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4항

1. 화력 분야와 원자력 분야 노사전협의체를 각각 구성한다.
2. 노사전협의체는 한전KPS 측(노·사 포함 4인), 한전KPS 하청노동자 측 4인, 전문가 위원 6인과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한다. 전문가 위원은 한전KPS, 대책위, 정부가 동수를 추천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정부가 추천하고 협의체 합의를 거쳐 정한다. 단, 양 노사전협의체 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3. 화력 분야는 2026.3.31.까지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완료한다. 직접고용은 2026.5.31.까지 완료한다.
4. 원자력 분야는 2026.4.30.까지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완료한다. 직접고용은 2026.6.30.까지 완료한다. 단, 원자력 분야의 기존 계약기간이 2026.6.30.을 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직접고용을 완료한다.
5. 한전KPS는 직접고용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련 하도급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6. 정부와 한전KPS는 노사전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5항

한전KPS는 소 취하 등 기존 소송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6항

노사전협의체는 한전KPS의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7항

정부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의 운영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협의체 위원 8명으로 이행 점검 기구를 구성하여 직접고용 완료 시점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한다.

[첨부자료2]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정 협의체 제 13차 전체회의 회의록 발췌

- 하청 노동자 4인은 여기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하면 되는 것인지 (전**) → 그러함(위원장)